

김명수 내일 운명의 날...통과는 안갯속

〈대법원장 후보〉

4당 원내대표 표결 합의 與, 野 3당 밀착 설득 총력 한국·바른정당 “부적격” 국민의당, 자율투표 재확인

여야가 오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여야 간 대표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했다. 또, 4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 인준 처리 일정이 확정되면서 당정청은 국민의당 등 야 3당에 대한 밀착 설득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움직이는 게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가 모두 직간접적 접촉을 시도한 데 이어 국민의당 개별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당정청은 설득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동성애 지지자’라는 일부 기독교계의 판단은 오히려 김 후보자 취임 시 인사 공평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귀국하면 안 대표와 통화를 하든, 면담을 하든 접촉



“김명수 인준 처리합니다” 정세균(사진 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후 국회 의정실에서 회동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방위로 전화를 돌리며 김 후보자 인준을 강요·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치공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특정 이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며 “김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부적격 인물로, 무리하게 정치적 짐을 쓰고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작으로, 또 군사작전을 퍼뜨려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해 놓았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자율투표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직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인지, 사법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에 역량과 자질 갖춘 후보인지 이

세 가치를 중심으로 의원 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지도부의 전발) 사과 이후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을 동원해서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3·3·3 (추천) 원칙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헌법재판장 지명에 대해 1년짜리가 아닌 6년 임기를 가진 소장을 추천하라는 우리 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외면한 채 김명수 후보자가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 찬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靑, 송영무 국방장관에 ‘엘로카드’

한국·바른정당 “안보라인 빼격” 공세...여 “지나친 비약”

북한 핵 위기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총동하고 여기에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압중 주의 조치를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이 빼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강요상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성급한 조치와 안이한 안보관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안에 기름을 부어준다”며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송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외교안보팀의 ‘엇박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송 장관의 돌출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도 확

산되고 있다. 문정인 특보의 의견에 불만이 있다던 정무내에서 해결해야지 국회에서 표출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안보라인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 “매우 비약”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혼선이라고보다 자유롭게 말하는 특보와 정부를 대변해야 하는 국방장관 간의 얘기”라며 “이를 정부 외교안보라인 혼선으로 표현하는 건 매우 비약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적절한 발언을 사려 깊게 판단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청와대가 정무적 행위의 일환으로 장관이나 국무위원 등에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것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송 장관이 아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공개 비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송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외교안보팀의 ‘엇박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송 장관의 돌출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도 확

‘국민통합포럼’ 공식 출범

국민·바른정당 정책연대 주목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여한 ‘국민통합포럼’이 공식 출범한다. 정치국회가 시작된 시점에서 이 모임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를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주도하는 이 포럼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출범식을 겸한 조찬모임을 갖고 이후 활동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 의원이 밝혔다.

이 모임에는 국민의당에서 황주홍,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손근우,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최도자 의원, 바른정당에서 강길부, 김재선, 이학재, 이종구, 박인숙, 오신환, 하태경, 황철호 의원(선수·가나다 순)이 각각 참여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적폐청산위 ‘이명박 정조준’

與,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한국당 언론장악 의혹 국조 촉구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등 국가정보원의 각종 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확대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을 향해 언론장악 의혹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 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내부 문건의 지침에 따라 2009~2011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시위를 조장하고, 온라인상에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청원문을 내는 활동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를 생산·소비 구분 없는 도시로”

강기정, 국회서 ‘스마트시티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토론회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이끌고 있는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1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공동으로 ‘스마트시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박준석 국민대 교수, 이정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 이재용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센터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김경호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이 패널로 참석, 토론을 진행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스마트시티 시대는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광주가 스마트시티를 넘어 생산과 소비의 구분 없는 스마트 프로슈밍(prosuming)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경제 시대 미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위해서는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흥노 교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개별 도시의 특색을 강조하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때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시대가 열린다”며 “광주에 국가인공지능연구원(가정)을 설립,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가라운지

최경환 “재정자립도 따라 지방비 부담 조정해야”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정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생생대기 정책 때문에 지방정부는 가량이 찢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정을 예로 들며 “북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4%다. 총 예산 5476억원 가운데 66%인 3619억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자체 사업과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주 100억원 수준”이라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방비 비중을 없애거나 부담 비율을 기존 5대 5에서 지자체 요구인(정부 8, 지자체 2 또는 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청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지	일반물건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입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95평 감정가 202,000,000 최저가 202,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담양군 용면 용리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입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454,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장성군 장성읍 유림리 유림제인근 보전관리지구 입야 90000평 감정가 522,000,000 최저가 522,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종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광산군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군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동선지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대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입야 42000평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입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